

윤석열 당선인 가상자산 공약 분석

- IEO를 중심으로

2022. 3. 24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강연자 소개



권오훈 변호사

-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
-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
-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
- 서울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
- 과기정통부/NIPA 블록체인 규제개선 자문위원
-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위원

ohkwon@chakwon.com

02-3495-0957

강연 순서

1. IEO가 능사일까? – IEO의 문제점 및 대안
2. 업권법의 핵심은? – 가상자산 부당거래 환수 가능여부
3. 왜 하필 5000만원일까? –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
4. NFT도 세금을 내야 할까? – NFT 과세 정책 예상

IEO가 능사일까?

– IEO의 문제점 및 대안

③ 국내 코인발행(ICO) 허용, 거래소발행(IEO) 방식부터 시작

- ▶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(IEO: Initial Exchange Offering)
방식부터 도입할 계획

*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발취

IEO가 능사일까? – IEO의 문제점 및 대안

• IEO란?

- ✓ IEO - Initial **Exchange** Offering
- ✓ 가상자산 상장 방법 중 하나 - 주식시장의 IPO를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
- ✓ 2017년 바이낸스가 출시한 IEO 플랫폼 런치패드가 기프트(GIFTO)와 브레드(BREAD)를 성공적으로 출시
- ✓ ICO, IEO, IDO 등 다양한 상장 방법 존재

IEO가 능사일까? – IEO의 문제점 및 대안

• IEO vs ICO

✓ ICO란? - Initial **Coin** Offering (IPO를 적용한 최초 가상자산 상장 방법)



ICO 구조도

✓ ICO와 IEO의 차이

- IEO가 투자자 보호에 더 유리

✓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ICO 전면 금지(IEO 포함)

- ICO의 문제점(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, 다단계 금융 사기 등)

IEO가 능사일까? – IEO의 문제점 및 대안

- 윤 당선인의 공약

- ✓ “국내 코인발행(ICO) 허용, 거래소발행(IEO) 방식부터 시작”

- ✓ 투자자 보호를 위해, 곧바로 ICO를 허용하기 보다 IEO부터 허용하며 단계적으로 규제완화

- ✓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거래소 중, 일정 기준(ex 자금세탁방지(AML)요건)을 충족하는 거래소부터 IEO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 높음

IEO가 능사일까? – IEO의 문제점 및 대안

• 과연 IEO는 안전할까?

✓ IEO vs IPO

✓ IPO - 주관사(증권사, IB)와 거래소(KRX)가 분리되어 각자 역할 분담

- 근거: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, 자본시장법 제7편 제377조

IEO - 거래소가 매매중개, 체결, 청산, 결제, 예탁, 심사, 상장 기능을 모두 담당

✓ 거래소는 믿을 수 있을까? - 이해상충, 특수관계인, 담합 및 독점 문제

-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2년 기준 75%에 육박



IEO가 능사일까? – IEO의 문제점 및 대안

• 더 안전한 IEO를 위한 제안

- ✓ 거래소와 분리된, 독립적인 전문 상장지원 전담 기구(또는 업체) 신설
 - IPO의 주관사(증권사, IB)의 역할 - ex)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
 - 전담 기구(또는 업체)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제안
 - ex)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, 임원의 자격 요건,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
- ✓ 거래소는 상장 심사 및 매매중개만 수행
 - IPO의 거래소(KRX)의 역할

업권법의 핵심은?

- 가상자산 부당거래 환수 가능 여부

② '디지털자산 기본법'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

- ▶ 코인 부당거래 수익,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
- ▶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

*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발취

업권법의 핵심은? - 가상자산 부당거래 환수 가능 여부

• 업권법의 내용

✓ 업권법이란? - 윤 당선인: “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”

✓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

- “코인 부당거래 수익,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”

- “해킹,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/확대”

- “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”

업권법의 핵심은? - 가상자산 부당거래 환수 가능 여부

• 코인 부당거래 수익이란?

✓ 자본시장법 규제 행위

- 내부자 거래 (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)
- 시세 조종 (주가조작)
- 부정거래행위 (부정한 수단, 계획 사용 등)

✓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 X

✓ 코인 부당거래 수익

- 가상자산 시장에서 위 행위를 하거나,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얻은 가상자산 수익

업권법의 핵심은? - 가상자산 부당거래 환수 가능 여부

• 코인 부당거래 수익 환수 방법

✓ 형법의 몰수, 추징 규정 존재

- But 원칙적으로 판결 전 집행 불가

✓ 피의자(피고인)이 수사(재판) 단계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, 처분하면

사실상 환수 불가능

✓ 공소 제기 전 몰수보전은 특별법의 별도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

- ex)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

업권법의 핵심은? - 가상자산 부당거래 환수 가능 여부

• 코인 부당거래 수익 환수 방법

- ✓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부당거래 수익 환수 조항 포함 예정
- ✓ 수사 과정에서 몰수, 추징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국고에 귀속
 - ex)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(범죄피해재산의 특례) ② 이 법에 따라 몰수·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.
- ✓ 다만, 현재 몰수, 추징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
 - 2000년대 부터 실제 범죄수익 몰수, 추징제도의 활용이 미비한 상황
 - 몰수특례법 난립으로 인한 몰수대상범죄 중첩 및 적용 경합에 의한 몰수특례법 체계상 혼란

왜 하필 5000만원일까?

-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

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

- ▶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
- ▶ 선(先)정비 · 후(後)과세 원칙 유지

*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발취

왜 하필 5000만원일까? -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

•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정책

- ✓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최초로 가상자산 과세 내용 포함
- ✓ 가상자산의 양도, 대여로 발생한 소득 - 기타소득
- ✓ 250만원까지 비과세 -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% 분리과세
- ✓ 2023. 1. 1. 이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터 적용
 - 한 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 있음

왜 하필 5000만원일까? –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

•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 공약

✓ 윤 당선인의 공약: "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"

✓ 선 (제도)정비, 후 과세 원칙 강조

- 실제 가상자산 과세 정책 시행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

✓ 현행 비과세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

왜 하필 5000만원일까? –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

• 왜 하필 5000만원일까?

- ✓ 윤 당선인의 공약: “주식 양도세 폐지”
- ✓ 2023년부터 주식,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
‘금융투자소득’으로 묶어 과세 예정
- ✓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식
 - 국내 상장주식 + 공모 주식형 펀드 : 5000만원
 - 그외 기타 금융투자소득 : 250만원

왜 하필 5000만원일까? –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

- 왜 하필 5000만원일까?

- ✓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과의 형평을 주장

- ✓ 신설될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모두 2023년 부터 적용

- ✓ 가상자산을 주식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는 의지

왜 하필 5000만원일까? –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

• 가상자산 과세 정책 흐름 예상

✓ 가상자산을 주식에 준하여 과세

- 가상자산과 상장주식 투자소득을 합산하여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
- 가상자산(현재 무형자산)을 상장주식과 같이 금융자산으로 분류
-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%, 3억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%의 세율 적용

✓ 가상자산과 주식을 구분하여 과세

-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
- 현행 소득세법 상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개정
-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% 세율 적용

NFT도 세금을 내야 할까?

– NFT 과세 정책 예상

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

- ▶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
- ▶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
- ▶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

*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발채

NFT도 세금을 내야 할까? – NFT 과세 정책 예상

• 현행 NFT 과세 정책

- ✓ NFT 관련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
- ✓ 현행법상 NFT를 특정하여 과세할 근거 규정은 존재 X
- ✓ 다만, NFT도 현재 가상자산 과세의 근거가 되는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논란
- ✓ 현재 NFT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'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(FATF)'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중

NFT도 세금을 내야 할까? – NFT 과세 정책 예상

• NFT의 법적 지위

✓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주장

- FATF는 일반적인 NFT를 "지불이나 투자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고 있다"고 정의
- 2021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며,
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언급

✓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주장

- FATF는 동시에 "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NFT도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"고 지적
-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021년 현행 특금법 규정에 NFT도 포섭될 수 있다고 언급
- 이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NFT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
- 이에 따르면 NFT의 성질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NFT도 세금을 내야 할까? – NFT 과세 정책 예상

- 윤 당선인의 공약

- ✓ NFT만을 위한 별도의 공약 X

- ✓ NFT와 가상자산을 함께 묶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

- NFT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규율할 것으로 예상됨

- ✓ 다만 이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(몇 가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

- 모두 허용하는 방식)가 될 것

NFT도 세금을 내야 할까? – NFT 과세 정책 예상

• NFT 과세 정책 예상

- ✓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, 앞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
- ✓ 다만, 이 경우에도 각 NFT의 활용 방식과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- ✓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, 윤 당선인의 다른 가상자산 공약 이행과 맞물려, NFT의 법적 성질이 결정될 가능성 높음
- ✓ 이 경우, NFT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고려하여, NFT를 형태와 목적에 따라 유형화해야 한다는 현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 높음
- ✓ 이에 따라 특정 성질을 가진 NFT의 경우 과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

감사합니다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※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·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, 이 자료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